

# 野 “朴정부 탄핵감” 與 “야당도 수사를”

### 여야 ‘성완중 파문’ 공방 치열 정청래 “내각 총사퇴해야” 김성태 “문재인 대답해야”

여야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정치분야 질의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에 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거론된 점을 들어 “정권 탄핵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야권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열 번이고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 뒤 “총리와 비서실장 등 정권의 실세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건인지도 모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이 총리의 연루 의혹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만났던 이윤희 태안군의회 부의장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이 두려웠기에 토요일 새벽에 15번이나 전화를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리는 “총리로서 원칙만 강요하고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李 총리 표정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오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번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2시간 가량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집 주변에서 배회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 전 실장과 성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

라고 문 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깊은 친분 관계가 없었다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총리는 “(경남기업 입수수색 이후) 지난 3월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실을 말하기에 억울하고 미흡한 게 있다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 이를 섭섭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남기업과 고인(故人)으로부터 후원금을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면서 검찰 소환 요구가 오면 응하겠다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당 의원도 자신과 접촉해 자원의외교 비리 혐의에 수사를 받던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구명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른 의원들이 총리에게 성 전 회장에 대한 구명 활동을 해온 적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여야 의원들, 충청권 의원들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다”면서 “나한테 구두로 한 분들 중에는 야당 의원도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비장한 각오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

## 與 지도부 “검찰 수사” 소장파 “특검 도입” 정당 지지도 새누리 33.8, 새정치 29.6%

### ‘성완중 파문’ 진화 이견

‘성완중 리스트’ 파문의 조기 진화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지도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방점을 두며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반면, 진이(진이 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는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한 목소리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명운과 명예를 걸고 밝힌 뒤 국민이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 이해가 안 간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진이계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 의원들은 특검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야침소리’는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성완중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중 리스트’ 파문을 두고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며 대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 연루설과 관련, “회피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기류 속에서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로 인해 야권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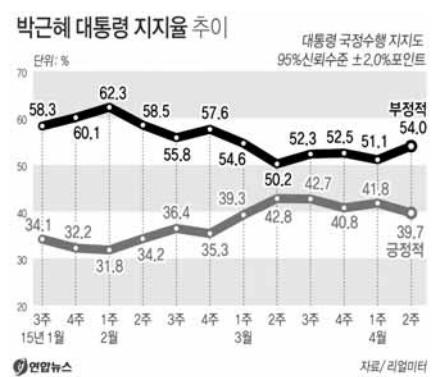
같은 기간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봉

### 박대통령 지지도 30%대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성완중 리스트’ 파문까지 겹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떨어지고 여당 지지도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7%(매우 잘함 11.4%·잘하는 편 28.3%)로, 지난 3월 첫 주 이후 5주일 만에 다시 30%대를 기록했다. 13일 밝혔다. 반면, 이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54.0%(매우 잘못함 33.3%·잘못하는 편 20.7%)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일주일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3.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봉



합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1.8%포인트 상승한 29.6%로 다시 30%에 가까워졌다. 정의당도 0.5%포인트 오른 4.3%를 나타냈다. 리얼미터 측은 “참사 1주기를 맞는 세월호 정국에 성완중 전 회장 자살 파문이 겹치면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반면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봉합된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

### 정승 “상무·화정·풍암권 주거환경 개선 역점”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화정권의 경우 급호시영 및 화정주공, 염주주공아파트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거주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화정동과 쌍촌동 일대의 오래된 하수관거를 교체, 오페수로 인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지 수질 문제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풍암·화정·금호동 일대에 걸쳐있는 ‘중앙공원’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적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자본을 유치해 광주의 ‘센트럴파크’로 명품공원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영택, 오늘 선대위 출범...문재인·박지원 대거 출동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14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선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한다고 13일 밝혔다.

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유일한 수권 대안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 천정배, ‘성완중 리스트’ 특검 즉각 실시 촉구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13일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후보는 “형사법 이론에서 입증의 기술은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특별히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서 “숨진 성 회장이 남긴 메모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자료라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그 수뇌부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구성돼 박근혜 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다”면서 “더구나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과도 관련이 있는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만으로도 ‘연목구어’라고 비판했다.

### 강은미, 윤장현 광주시장 만나 정책 제안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중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및 통진노동자 고용보장 및 노동조합 중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강 후보는 “오는 2020년 ‘장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중앙공원은 부분별한 개발로 망가질 것”이라며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

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LG U+(엘에스엘)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몇 달째 길바닥에 앉아 있다”며 “LG U+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와 회사의 노동단압이 중단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남일, ‘성완중 리스트’ 관련자 검찰에 고발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13일 옛 통합진보당 후보인 서울 관악을 이상규 후보, 성남 중원 을 김미희 후보를 비롯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가’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민심이다”며 “이번 사건도 청와대 문건 파문처럼 시간끌기와 물타기로 꼬리를 자르고 버틴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